

김정은의 일본 지진 위로 서한의 배경과 함의

서 보 혁(북한연구실 연구위원)

Online Series

2024. 1. 8. | CO 24-03

1월 5일 북한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 김정은’ 명의로, ‘일본 총리 기시다 후미오 각하’를 수신인으로 하여 지난 1일 발생한 노토반도 강진 피해를 위로하는 서한을 보냈다.¹⁾ 서한에서 김 위원장은 “당신(기시다 총리)과 당신을 통하여 유가족들과 피해자들에게 심심한 동정과 위문을 표합니다”라고 언급하며 피해 회복을 기원한다고 말했다. 북한의 이런 움직임은 서북 해안 일대에서 남한을 위협하는 포사격 훈련을 3일 연속 실시하는 가운데 일어난 것이다.

김정은의 위로 서한의 배경

북한의 이런 대일 인도적 서한은 몇 가지 측면에서 이례적인 처사로서 그 배경에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먼저, 지진 피해 등 일본에서의 자연재해에 대하여 적성국 관계에 있는 북한이 위로 서한을 보내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북한은 지난 연말 발표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결과에서 한미일 3각 공조체제를 비난하면서 일본을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의 “줄개”, “충견”이라고 비난하였다. 그런데 이렇게 일본 총리에 위로 서한을 보내는 행보의 배경에 관심이 모아질 수밖에 없다.

둘째는 서한의 발신자와 수신자 명의를 김정은과 기시다, 즉 양측의 최고지도자라는 점에서

1) 한 논평자의 언급처럼, 북한측이 이 서한을 왜 지진 발생 4일 후에 보냈는지는 단정하기 어렵다. 내부적으로 서한 발송 여부를 포함해 검토하는 데 시간이 들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지진 피해 발생 직후 보냈다면 일본 내 긍정적인 반응이 더 컸을 것이다.



서한의 비중이 높다는 사실이다. 물론, 북한은 과거 몇 차례 일본의 대규모 자연재해에 위로 서한을 보낸 바 있다. 그러나 발신이 북한의 최고지도자이고 수신인도 일본의 최고지도자인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고, 그것도 김정은 정권 들어서이다.

셋째, 이번 서한은 일본의 지진 피해를 위로하는 것 외에는 다른 이슈를 다루지 않은 매우 간단한 내용이다. 이렇게 간단한 서한이지만 위에서 언급한 두 가지 측면을 묶어 생각하면 북한이 일본과 당국 간 대화와 접촉을 추진할 의향이 있다고 읽을 수 있다. 일본 정부는 6일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의 기자회견에서, 세계 각국의 위문 메시지의 하나로 김정은 위원장의 메시지를 언급하면서 “감사의 뜻을 표하고 싶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하야시 장관은 “2011년 동일본대지진을 포함해 북한 최고지도자가 일본 총리 앞으로 지진 등과 관련해 위문 메시지를 보낸 것은 최근에 예가 없었다”고 말하며,²⁾ 지금은 상황이 없어 “각국 정상 등의 메시지에 대한 회신은 현시점에서는 하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이는 피해 회복 등 상황이 정상화되면 일본 총리가 적당한 형태의 답신을 북한에 보낼 수도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북한의 의도

그럼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일본 총리 앞으로 위로 서한을 보낸 의도는 무엇일까? 김정은의 대 기시다 서한이 북한의 해안포 사격 훈련과 동시에 일어난 점을 고려할 때 ‘통일봉남(通日封南)’ 전술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한미일 대북 협력관계 약화를 노릴 수 있다. 북한의 최대 안보 위협은 더욱 발전하고 있는 한미일 연대임을 북한 스스로 강조하고 있어 그런 관측을 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이 지지율 바닥을 보이고 있는 기시다 정권을 자극하고, 인도적 문제를 소재로 삼아 일북 대화를 추진할 의향을 표명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기시다 정권은 작년 말, 지지율이 20% 아래로 내려가 반전의 카드가 필요한 입장이다. 북한으로서는 작년 말 곡물 생산이 목표 대비 103%를 달성했다고 자체 평가했지만, 국제적 기준으로는 주민의 40% 가량이 정상적인 식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 마당에 5개년 경제발전계획의 목표 달성을 향해 주민들을 독려하기 위해서는 외부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이끌어내야 할 입장이다. 그런 차원에서 북한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레짐의 주요 멤버인 일본으로부터 향후 인도적 지원을

2)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때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에 위로 전문을 보낸 바 있다. 또 1995년 고베 대지진 때 강성산 총리가 무라야마 도이치 일본 총리 앞으로 위로 전문과 위문금 20만 달러를 보냈다.



이끌어낼 수 있는 정지작업을 해두는 것은 적절한 처신일 것이다. 물론 북한의 대화 의지에 의문이 생길 수 있다. 일본에 위로의 서한만이 아니라 소량이라도 위문품을 보내거나, 서해안 사격훈련 중단과 같은 조치는 없었다는 점에서 그렇다.

기시다 내각이 납치자 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과 대화의 문을 열어놓은 점도 김정은의 서신 발송 결정에 고려되었을 것이다. 실제 작년 상반기에 일본과 북한은 제3국에서 두 차례 비공개 접촉을 한 것으로 일본 언론이 보도한 바 있다. 그런 맥락에서 볼 때 김정은이 기시다를 지목해 지진 피해 위로 서한을 보낸 것은 인도적 문제로 대화나 접촉을 진행할 북한측의 강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 하겠다. 지난해 말 북한은 새해 정책 방향을 제시하면서 대외정책을 언급하며 “당의 존엄사수, 국위제고, 국익수호의 원칙에서 강국의 지위에 맞는 공화국의 외교사를 써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만약, 김정은의 이번 위로 서한에 기시다 총리가 답신하고 인도적 대화를 재개한다면, 북한으로서는 위와 같은 대외정책의 순조로운 출발을 여는 셈이다. 이와 관련해 6일 하야시 장관은 “일본과 북한 간 대화에 대해서는 이번 메시지(김정은의 위로 서한)에 대한 대응을 포함해 사안의 성질상 답변을 삼가겠다”고 말했는데, 여운이 남는 언급이다.

정책적 함의

문제는 북한이 인도적 문제를 명분으로 한미일 대북 제재의 틀을 약화시키고 남한을 고립시키려는 접근에 우리가 대응해야 한다는 점이다. 일본은 특유의 실리주의적 외교의 연장선상에서 1980년대 말~1990년대 초와 1990년대 말에 일북 관계 개선을 향한 일련의 접촉을 전개한 바 있다. 특히 냉전 해체기 일본의 대북 접촉은 한국 정부와 조율이 부족하였고 남북 대화와 조화있게 전개되지 못하여 양국 간 외교문제가 된 바 있다. 이에 대한 재평가를 기초로 한(미)일 사이에 대북정책 협력을 더욱 긴밀히 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비핵화가 진전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인도적 문제를 둘러싼 북한과의 대화 여부와 그 대응 방식이 한일 간 우선 대책 과제로 부상하는 형세이다. 인도적 문제는 대북 제재 속에서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1718위원회의 제재 면제하에, 혹은 관련국들 간 비공개 대화로 진행할 수도 있다. 북한이 납치자 문제를 사실확인/서신교환/상호방문 등으로 분할해 접근하는 협상 전술 가능성에 대해 한국은 일본과 공동 대응책을 협의하는 한편, 남북 간 인도적 대화를 위한 사전 대비도 강구해놓아야 할 것이다.

올해 한미일은 국내정치적으로 중요한 정치적 일정이 예정되거나 예상되고 있어 대북정책의 일관성 차원에서 3국 간 공조가 도전받을 수 있다. 이에 한미일은 고위급회담뿐 아니라, 북핵과 인도적 문제 등 주요 이슈별로 3국 간 실무협의를 활발히 전개해 정책 공조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같은 맥락에서 3국 전문가들 간 정책 협의와 공유하는 정책에 대한 3국 국민들을 향한 공감대 확대 노력도 중요한 과제로 다가오고 있다. ©KINU 2024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통일연구원의 공식적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